국교련 회의자료
임시총회-11-001

2011년도 제1차 임시총회

2011. 04. 08(금) 15:00
경북대학교 교수회 대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1년도 제1차 임시총회」

□ 개요

○ 일 시 : 2011년 4월 8일(금) 15:00
○ 장 소 : 경북대학교 교수회 대회의실(복지관 3층)
○ 참석대상 : 국교련 회원교 회(의)장 및 임원

□ 프로그램 및 시간계획

•사회 : 전현수 (국교련 사무총장 내정자)

시간	내용	비고
14:30~15:00	• 등록	
15:00~15:10	• 개회, 성원보고, 주요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김형기** (상임회장)	
15:10~16:30	**• 공로패 증정** **• 사무총장 임명동의(안) 처리** **• 업무보고** **• 안건 토의** - 2011년도 국교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16:30~16:50	휴식	
16:50~17:50	**• 전체 토론** - 국립대선진화방안 대응 건 등 • 폐회	
18:00~19:30	**• 만찬**	

목 차

I. 업무 보고

1. 201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 1

2. 활동보고

1) 2011년도 제1차 회장단 회의 ····· 5

2) 제1차 법률자문교수단•회장단 연석회의 ····· 7

3) 2011년도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 ····· 8

4)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실행위원회 구성 ····· 9

5) 2011년도 제3, 4차 국립대공투위 회의 ····· 10

3. 현황보고

1) 고등교육법개정 청원 서명 현황 ····· 13

2) 「학장 직선제 폐지」 시행령 공포 이후 실태조사 ····· 14

II. 안건

1. 회칙 개정(안) ····· 21

2. 임원 임명동의(안) ····· 24

3. 2011년도 사업계획 ····· 26

4. 법률자문교수단 활동계획(안) ····· 30

5. 정책위원회 활동계획(안) ····· 31

6.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활동계획(안) ····· 33

7. '국립대공투위' 와의 관계설정 건 ····· 35

III. 참고자료

1. 2011년도 회장단 명단 및 연락처 ····· 36

2. 회원교 회(의)장 명단 및 연락처 ····· 37

3. 회원교 임원 명단 및 연락처 ····· 38

4. 정책위원 명단 및 연락처 ····· 43

5. 법률자문교수단 명단 및 연락처 ····· 43

6. 사무처 명단 및 연락처 ····· 43

7. 보도기사 ····· 44

IV. 안내사항 ····· 54

I. 업무보고

1. 201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2011년 국교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15:00 - 18:00
장 소 :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

성원보고 : 25개 대학 참석, 8개 대학 위임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1. 강릉원주대 회장 박찬일 수석부회장 구자혁 **2 강원대** 의장 김세환, 부의장 남시병,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3. 경북대** 의장 김형기, 부의장 김형래, 부의장 이광호 사무처장 전현수 사무부처장 조현미 사무부처장 이원하 **4. 경상대** 회장 마대영, 부회장 차영길 부회장 김정균 사무국장 차춘남 **5. 경인교육대** 차기회장 신영준 **6. 공주대 회장** 최복길 **7. 금오공과대** 회장 박종윤 **8. 대구교육대** 회장 양선규 **9. 목포해양대** 의장 최주열 상임위원장 조대환 **10. 부경대** 회장 최연욱 부회장 김영일 **11. 부산대** 회장 정용하 차기회장 이병운 **12. 서울대** 회장 호문혁, **13. 안동대** 의장 김시주, 부의장 노석호 정책국장 김석규 **14. 전북대** 회장 박병덕 **15. 전주교육대** 회장 이용주 **16. 제주대** 회장 양길현 **17.진주교육대** 회장 정호범 **18. 창원대** 의장 정차근 부의장 이수현 부의장 김창순 사무국장 안철진 **19. 춘천교육대** 회장 신준식 **20. 충남대** 회장 김필동 차기회장 김용완 **21. 충북대** 회장 오원태 부회장 서관모 **22. 충주대** 회장 권 일 수석부회장 이병찬 상임위원장 정순석 **23. 한국교원대** 의장 이민부 사무총장 김종우 **24. 한국 해양대** 회장 이상태 **25. 한밭대** 의장 이종원 부의장 진영택 부의장 박덕용 사무처장 우승환 (총 25개 대학)

위임장 제출 회원교: 1. 광주교육대 2. 목포대 3. 서울교육대 4. 인천대 5. 경남과학기술대 6. 청주교육대 7. 한국방통대. 8. 전남대**(대리 참석)** 기획간사 최영수(총 8개 대학)

국교련 고문 김광렬 자문위원 이준원 자문위원 이시원 사무총장 최백렬 전문위원 이은성

<안건 토의 및 의결사항>

안건토의 1. 성과연봉제, 학장임명제 등 국립대선진화 방안 대응책 : 기금 모금, 위헌소송 제기

- 소송 시기, 소송 주체, 변호사 선임, 성과연봉제와 학장임명제의 병합 여부 등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법률자문교수단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기로 함.
-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 및 기금모금 시한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안건토의 2.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추진

- 법률자문교수단 자문 및 논의 후에 총회 의결을 거쳐 실행하도록 함

법률자문교수단 명단

소속 대학	성명	연락처	비고
경북대학교	김창록		
서울대학교	박정훈		
전남대학교	조상균	010-9499-0249	062-530-2338
제주대학교	신용인	016-433-7419	
충북대학교	김용규	010-7130-5110	
충남대학교	정주백		
강원대학교	김학성	010-3857-6511	
부산대학교			추후 연락
전북대학교			추후 연락

안건토의 3. 상임회장/공동회장 선출

- 상임회장 :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공동회장: 지역별, 산교련/지교련/교협연 안분

  강원대 김세환, 경상대 마대영, 부산대 이병운(차기회장), 서울대 호문혁, 순천대 박오복(지교련), 안동대 김시주, 전남대 문 희, 충북대 오원태, 한밭대 이종원(산교련), 교협연 대표 (3월 선출 후 통보하기로 함) 10인
- 감사 : 제주대 양길현, 충남대 김용완(차기회장)

기타 안건 : 성명서 채택(첨부)

◆ **폐회 :** 18:00

첨부: 2011년 국교련 정기총회 성명서

정부는 국공립대학 통제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대한민국의 40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을 대표하는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소위 '국립대 선진화 방안',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인 법인화, 성과연봉제, 학장직선제 폐지, 교육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그간 여러 가지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우려와 분노의 뜻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국회 상임위 검토도 없이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 법의 시행에 나서고 있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학장 직선제 폐지 또한 당사자인 국공립대 교수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는 그 표면적 명분인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구실로 내세워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도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내건 '자율'이라는 구호와는 전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황폐화시킬 정책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강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시민의식과 창조적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보루중의 하나인 국공립대학을 교과부에 순종하는 행정기관으로 순치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우리 국교련은 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공립대학을 황폐화시킬 소위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국공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모델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분노와 충정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그 표면적 명분과 달리 국공립대학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를 즉각 포기하고, 모든 국공립대학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공립대학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 국공립대학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반감과 분노만 야기하면서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의 공교육과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시 대화에 임하라!

2011년 2월 1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2. 활동보고

1) 2011년도 제1차 회장단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11년 3월 11일(금) 11:00~13:40
○ 장 소 : 서울역 4층 '이즈미' 일식당
○ 참 석
- 상임회장 : 김형기(경북대)
- 공동회장 : 김세환(강원대), 마대영(경상대), 양선규(대구교대), 이병운(부산대), 호문혁(서울대), 박오복(순천대), 김시주(안동대), 문 희(전남대), 오원태(충북대), 이종원(한밭대)
- 감 사 : 김미연(충남대, 대리참석)
- 배 석 : 김형래(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실행위원장)
- 사 무 처 : 전현수(사무총장 내정자), 황종인(전문위원)

□ 회의 결정사항

① 정책위원장 및 정책위원, 실행위원장 임명 동의 건

○ 만장일치로 통과

② 학장 직선제 폐지 건

○ 직선제 폐지 시행령 공포 이후, 국교련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첫째, 총장은 학장 지명시,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 둘째, 총장의 학장 지명 후, 단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임명동의를 거친다.
- 위 두 가지 사항을 각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명문화 한다.

③ 교육대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건

○ 국교련은 교육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다.

④ 성과연봉제에 관한 건

○ 헌법소원 추진을 재확인한다.
○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법률대응 추진 의지를 상임회장 명의로 회원교 교수들께 표명하기로 한다(기금 활용 방법 등을 포함).
○ 성과연봉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한다.
○ 정치권에 대해 성과연봉제 반대 홍보를 강화한다.

⑤ 고등교육법개정 서명 및 국립대선진화방안법률대응기금모금

○ 현재까지의 기금모금과 서명운동 현황을 회원교에 통보한다.
○ 서울대도 서명과 기금모금운동에 협력한다.

⑥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설치 건

○ 만장일치로 합의

⑦ 4월 총회 개최(안)

○ 총회,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현판식,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을 연계하여 4월 8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 다만, 포럼초청연사의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⑧ 회칙 개정(안)

○ 원안대로 임시총회에 상정키로 한다.

○ 상임부회장제 신설 건은 다음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회장단 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도록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⑨ 예산편성(안)

○ 국교련 직책에 따른 분담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한다.

○ 세입·세출안은 총회 이전에 수정·보완하여 공동회장의 서면결의를 얻어 총회에 상정한다.

○ 다만 회의자료 중, '고등교육법개정기금'이라는 명칭은 '국립대선진화방안법률대응기금'으로 변경한다.

⑩ 공투위와의 관계 설정

○ 2011년 3월 10일 개최된 국립대공투위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교련이 그간 관행적으로 맡아오던 상임대표 직을 수락하지 않고 대신 공동대표는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임.

○ 전임 상임회장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한다.

2) 제1차 법률자문교수단·회장단 연석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19:00~21:30
○ 장 소 : 대전역 1층 '테리야끼' 식당
○ 참 석
- 회장단 : 김형기(상임회장), 전현수(사무총장 내정자)
- 자문교수단 : 김웅규(충북대), 김창록(경북대), 박정훈(서울대), 송기춘(전북대), 오정진(부산대), 정주백(충남대)

□ 회의 내용

○ 참석자 상견례

○ 상임회장이 아래와 같은 법률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법률자문교수단에 자문을 요청함.
1. 2월 1일「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에 의한 총장의 학장 지명권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대응
2.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에 관한 법적 대응
3.「고등교육법」개정을 위한 법적 대응

○ 법률자문교수단이 아래와 같이 자문함.
1.「교육공무원임용령」에 관해
- 개정된「교육공무원임용령」의 학장 지명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송기춘 교수의 책임 아래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2. 성과연봉제에 관해
-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려 시행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성과연봉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모아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3.「고등교육법」에 관해
- 법인화의 문제점과「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박정훈 교수의 책임 아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재정리하기로 함.
- 또한 국교련 차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와 구별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수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변호사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유사한 사안들을 다룬 경험이 많으므로, 방안을 강구할 때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김창록 교수를 법률자문교수단 간사로 선출함.

3) 2011년도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12:00~14:00
○ 장 소 : 경북대 교수회 소회의실
○ 참 석
- 김형기(상임회장)
- 정병호(정책위원장), 반상진, 차영길, 채형복(이상 정책위원)
- 전현수(사무총장), 김형래(실행위원장), 황종인(전문위원)

□ 회의내용

가. 상임회장 인사말
나. 그간 활동 및 경과 설명 : 사무총장
다.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논의

1) 정책논평
○ 주제 : 성과연봉제, 학장직선제 폐지, 법인화 등
○ 원칙적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국교련 정체성과 정책개발·논평 간의 상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방식
- 공식사이트 활성화 및 자유로운 글쓰기 유도
- 페이스북 등 활용 : 신속한 의제 공론화 가능
○ 고정필진을 구성하여 일정한 주기로 글 올리기와 병행하여 객원 필진 참여 유도
○ 정책포럼과 연계하여 운영

2) 기타 정책과제
○ 해외 법인화 사례 연구
- 입시, 학사, 인사, 조직, 재정,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3) 정책위원회 강화
○ 주요 거점대학별로 정책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 검토

4) 정책위원 변경
○ 차영길(경상대학교 교수) -> 김영석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4)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실행위원회 구성

□ 경과

○ 11.03.11 「제1차 회장단회의」에서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설치를 만장일치로 합의
- 김형래(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실행위원장)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거점대학 부회(의)장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
- 국교련 사무실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임시총회에 맞추어 출범식을 갖기로 함.

○ 11.03.25 추진본부 구성을 위한 실행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 발송(9개 거점대학)

□ 실행위원 추천자 명단

연번	소속대학/교수회	직책	성명	학과(부)
1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2	경북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김형래**	불어교육과
3	경상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차영길**	역사교육과
4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김종구**	도시공학과
5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6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부의장	**전덕영**	식품영양학과
7	전북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최백렬**	무역학과
8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송성희**	독일학과
9	충남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김미연**	불어불문과
10	충북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서관모**	사회학과

5) 국립대공투위 회의

가. 2011년도 제3차 국립대공투위 회의결과

▶ 일시 : 2011년 3월10일(목) 16시

▶ 장소 : 대학노조

▶ 참석 :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회장, 교수노조 허웅 사무국장, 공무원노조 정상춘 대학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공무원노조 이태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공무원노조 문완식 대학본부 전 사무처장, 대학노조 김병국 사무처장, 대학노조 백선기 국공립대본부장, 대학노조 강미경 국공립대본부 사무처장, 한대련 김효진, 서울대공대위 김연옥(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 참관 : 김지현 전남대 공과대학생회장 외 1명

Ⅰ.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 서울대공대위 : 3월24일 16시 총학생회 주최 3천인 선언 대회 개최 - '문화제'

Ⅱ. 논의안건

안건1. 2011년 국립대공투위 운영 건
안건2. 기타 안건

<논의결과>

1. 2011년 공투위 조직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다.
   ↳ 공투위는 상임대표를 국교련 김형기 상임회장께 맡아줄 것을 제안하고 국교련은 이후 회의를 통회 공투위 상임대표와 공투위 집행위원을 확정키로 함.

구분	이름	직책	소속
상임대표			
공동대표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	경북대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한신대
	우희종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서울대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	경희대
	박자은	한대련 의장	숙명여대
고문	류진춘	2007년 공투위 상임대표	
	김원식	2008년 공투위 상임대표	충남대
	김광렬	2009년 공투위 상임대표	충북대
	박병덕	2010년 공투위 상임대표	전북대

집행위원		국교련 사무총장	
		국교련 정책위원장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위원장	인천대
	허웅	교수노조 사무국장	교수노조
	최갑수	민교협 비상임공동의장	서울대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경북대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 직무대행	전남대
	문완식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처장	군산대
	백선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군산대
	강미경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처장	방송대
	김연옥	서울대공대위(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서울대
	정용철	서울대공대위(서울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서울대
집행위원장	김일곤	대학노조 사무부처장	대학노조

2. 2011년 상반기 주요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함.

3. 상반기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결의대회를 확정함.
  ↳ 집회 제목 : 서울대법인화법 폐기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
  ↳ 날짜 : 2011년 4월9일(토)
  ↳ 장소 : 서울역
    ↳ 서울대공대위 의견을 반영해 장소 최종 확정.
  ↳ 비용 : 850만 원가량 소요됨.
    ↳ 공투위 550만원 : 서울대공대위 250만원 : 공동행동 50만원 분담을 제안하기로 함.
  ↳ 공동 주최 : 서울대공대위, 공동행동, 각 정당에 공동주최를 제안하기로 함.
    ↳ 공동주최가 확정되면 이후 기획단(각 조직별 1명)을 구성해 집회 준비를 하기로 함.
    ↳ 기획단 : 국교련, 공무원노조, 한대련, 공동행동, 서울대공대위, 국공립대총학생회장연석회의, 공투위 집행위원장

4. 2011년 공투위 분담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체	분담금	비고
국교련	2,100,000	
교수노조	450,000	
민교협	450,000	
공무원노조	3,000,000	
대학노조	3,000,000	
한대련	-	
계	9,000,000	

  ↳ 공투위 분담금은 3월31일까지 집행위원장 계좌로 납부한다.
    ↳ 통장 : 예금주 김일곤 / 512602-01-217371 / 국민은행
  ↳ 2010년 분담금을 미납한 민교협은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한다.

5. 차기 회의는 2011년 4월1일(금) 16시에 대학노조 사무실에서 연다.

나. 2011년도 제4차 국립대공투위 회의

▶ 일시 : 2011년 4월1일(금) 16시
▶ 장소 : 대학노조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고문, 김형래 국교련 고등교육법개정 실행위원장, 공무원노조 정상춘 대학본부 본부장, 공무원노조 신창화, 대학노조 김병국 사무처장, 대학노조 백선기 국공립대본부장, 한대련 김효진, 김일곤 국립대공투위 집행위원장.

Ⅰ.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 국교련 : 4월8일 국교련 총회(경북대), 고등교육법개정 실행위원회 현판식 예정.
- 한대련 : 부산대+부산교대 4월5일 법인화 반대 공동행동, 경북대+대구교대 4월14일 공동행동, 4월2일 등록금 인하 '대학로' 집회 개최 예정.

Ⅱ. 논의안건

안건1. 2011년 국립대공투위 상임대표 선임 건
안건2. 4.9 결의대회 점검 건
안건3. 기타 안건

<논의결과>

1. 국교련 상임회장이 공투위 상임대표를 맡아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하고, 국교련 상임회장이 공투위 상임대표를 맡지 못할 경우, 국교련에서 차선 안 등을 제안하기로 함.

2. 4.9 결의 대회는 일부를 수정해 점검을 마침.
↳ 집회 당일 참가자 옷은 각 조직이 자율로 함.
↳ 집회 연사가 너무 많아 집행위원장은 연사들의 발언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함.
↳ 다음 주 월요일(4일) 행진 신고를 공무원노조가 반드시 낸다.
↳ 끝내 행진 불허할 경우 집회 사전에 '상복' 입은 채 1인 시위 가능 여부를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가 협의해 결정한다.
↳ 각 조직은 집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한다.
↳ 행진 때 퍼포먼스인 '영정'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을 만들어(한대련) 검토 후 확정한다.
↳ 집회 당일 시민에게 나눠줄 홍보물로 물휴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3. 공무원노조와 국교련은 공투위 분담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내기로 한다.

4. 국립대공투위 차기 회의를 4월29일 16시 교수노조 사무실에서 열기로 한다.
↳ 안건 : 국립대 공투위 활동 점검

3. 현황보고

1) 고등교육법개정 청원 서명 현황

(11.04.07 17시 기준)

연번	교수회명	교수수(명) * : 2010년 기준	서명자수(명)	서명원부 제출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381	**189**	O
2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940	**432**	O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166	**-**	
4	경북대학교 교수회	1,146	**575**	O
5	경상대학교 교수회	760	**466**	O
6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128	**-**	
7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85	**-**	
8	공주대학교 교수회	538	**309**	O
9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76	**-**	
10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330	**-**	
11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협의회	*187	**-**	
12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89	**-**	
13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300	**209**	
14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110	**-**	
15	부경대학교 교수회	578	**414**	O
16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83	**69**	O
17	부산대학교 교수회	1,156	**409**	
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협의회	*301	**-**	
19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회	*93	**-**	
20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1,751	**36**	
21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	*340	**-**	
22	순천대학교 교수회	307	**145**	O
23	안동대학교 교수 평의원회	*265	**-**	
24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254	**-**	
25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1,146	**226**	
26	전북대학교 교수회	996	**-**	
27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54	**36**	O
28	제주대학교 교수회	699	**-**	
29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70	**61**	O
30	창원대학교 교수회	*311	**196**	
3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66	**-**	
32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74	**-**	
33	충남대학교 교수회	894	**199**	O
34	충북대학교 교수회	736	**-**	
35	충주대학교 교수회	280	**211**	O
36	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	162	**97**	O
37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198	**-**	
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137	**-**	
39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243	**155**	O
40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243	**-**	
합계		16,673	**4,434**	

2) 「학장 직선제 폐지」 시행령 공포 이후 회원교 학장 선출방식 변화 실태조사

① 강릉원주대학교

사례명	강릉원주대학교
경과 및 최근 동향	2011년 1월 1일 및 3월 1일 부임한 학장은 모두 단과대학에서 선출되었음.
대학본부 입장 및 조치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학장을 임명함.
단대 교수회 입장 및 대응	대응할 필요 없음.
교수(협의)회 대응	대응할 필요 없음.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차기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② 경북대학교

사례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범대학
경과 및 최근 동향	- 2011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총회 개최,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수렴을 실시, 학장 후보로 적합한 2명을 선발해서 총장에게 통보 - 2011년 2월 사범대학 교수총회 개최,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자는 안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격론이 전개, 거수 표결 결과 부결
대학본부 입장 및 조치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 - 사범대학의 경우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조사를 할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배정시 단과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 -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범대학 학장을 3월 말에 지명
단대 교수회 입장 및 대응	- 2011년 2월 단과대학 교수회 임원진과 전체 교수회 임원진 사이에 의견 교환 -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
교수(협의)회 대응	- 교수회에서는 학장 임명동의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노력 “총장은 학장 지명시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학장 지명자는 단과대학 교수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2/3 이상의 지지를 못얻을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 향후 교수회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학장 후보자가 단과대학 교수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함

③ 경상대학교

사례명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경과 및 최근 동향	- 2010년 12월에 공과대학 교수회 주관으로 신임 학장 후보자 선출 - 2011년 1월에 공과대학에서 총장에게 신임 학장 후보자 선출 결과 통보 및 임용 요청 - 대학 본부는 공과대학에 선거 결과 철회를 요청 - 2011년 3월 초에 공과대학에서 본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신임 학장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 2011년 3월 16일 당선자를 학장에 임명
대학본부 입장 및 조치	- 선거결과를 철회(당선자 사퇴)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 3월 초 공과대학의 공문 접수 후 당선자 임명
단대 교수회 입장 및 대응	- 2회에 걸쳐 공과대학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 논의 - 당선자 임명을 위해 총장과 협의 진행
교수(협의)회 대응	- 2회에 걸쳐 교수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 총장에게 당선자 임명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 향후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장임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T 운영을 대학본부에 제안한 상태임 - 총장은 제도개선 의사는 있으나 규정화는 교과부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임.

사례명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경과 및 최근 동향	- 의전원 평의원회는 2011년 1월에 신임 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음. - 대학 본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 - 일부 의전원 교수들의 주장에 따라 당초 1월에 실시 예정이었던 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2월 11일에 개최하고 후보자를 선출하였음. - 의전원 평의원회는 선거 결과를 공고.(대학 본부에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은 하지 않음) - 총장은 2011년 3월 16일 당선자가 아닌 제 3자를 의전원장에 임명 - 3월 22일 의전원 교수회 총회 개최(총장에게 인사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 발표)
대학본부 입장 및 조치	- 당선자가 아닌 제 3자를 의전원장에 임명
단대 교수회 입장 및 대응	- 3월 22일 의전원 교수회 총회 개최(총장에게 인사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 발표)
교수(협의)회 대응	- 2회에 걸쳐 교수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 - 총장에게 당선자 임명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 단과대학 교수회장단과 총장 항의 방문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 향후 교수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장임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T 운영을 대학본부에 제안한 상태임 - 총장은 제도개선 의사는 있으나 규정화는 교과부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임.

④ 공주대학교

사례명	공주대학교
경과 및 최근 동향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교수회규정 개정 연구를 수행하였음 2. 평의원회 기능에 학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출하였음
대학본부 입장 및 조치	1. 일부 본부 보직교수는 교수회가 학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임 2. 총장은 교수회가 학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임
단대 교수회 입장 및 대응	1. 단과대학 교수회 회칙 중 학장선출 권한 삭제 예정 2.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학장 임명동의안 심의시 해당 단과대학 학장에 대한 심의 권한을 요구함 3.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2-3명의 학장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교수(협의)회 대응	1. 교수회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평의원회 심의기능 중 학장 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과 단과대학 교수회 권한(기능) 중 학장 임용후보자의 선출 조항을 삭제할 예정임 2. 평의원회 기능에 학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포함시키도록 추진 중 3. 교수회규정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대학본부와 협의할 예정임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1. 대학본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체 교수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임.

⑤ 순천대학교

사례명	순천대학교
경과 및 최근 동향	○ 지난 12월에 학장 선출이 있었고, 3월 2일자로 선출된 학장을 총장이 임명함. ○ 다음 학장 선거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학장임명제에 따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임.
대학본부 입장 및 조치	○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음.
단대 교수회 입장 및 대응	
교수(협의)회 대응	○ 학칙에 있는 단대 교수회 심의사항에 임명된 학장에 대한 심의를 명문화하는 방안. ○ 평의회의 심의사항에 학장 임명동의를 명문화하는 방안.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	

II. 안건토의

1. 회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 (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직전 전임 상임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역대 전임 상임회장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제14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1년 4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 현행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약칭 '국교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국립·공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연구·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립·공립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 회는 전국의 국립·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

제5조 (상임회장과 공동회장)
본 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을 둔다.
1. 상임회장 1인.
2. 공동회장 7~10인. 다만 권역별 대학에 5~8인, 산업대학에 1인, 교육대학에 1인을 안분한다.

제6조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선출)
1.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제1호의 표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표결을 통해 제5조 각호의 정수 내에서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한다.
3. 회원교의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1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장(의장)의 대리권자는 선거권만을 가진다.

제7조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
1.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회장이 사퇴 또는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이 아니게 된 사유 등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임기가 3월 이상이면 총회에서 재선출하고 3월 미만이면 공동 회장이 직무대리를 호선한다.
3. 공동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회원교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4. 제2호의 재선출 등에 의한 상임회장 또는 그 직무대리와 제3호의 승계에 의한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직무)
1.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이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2.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의 직무를 권역별 또는 직능별로 분장한다.

제9조 (회장단)
1.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으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2. 회장단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회장은 회장단회의의 의장을, 사무총장은 회장단회의의 서기를 각각 겸한 다.
4.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1. 본 회는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퇴 등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호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무처)
1.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인을 둔다.
3.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회장단의 직무를 보좌한다.
4.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적의 임면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2조 (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불참시 총회의 권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정책위원회)
1. 본 회의 정책활동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의 선임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2. 위원(장)은 총회 및 회장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 회에 회장단회의의 결정으로 회장단을 보좌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재정)
1.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개정)
이 회칙은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1994년 4월 1일 총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개정된 규정은 1997년 4월 1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개정된 규정은 1999년 4월 7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0년 3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2년 2월 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23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8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5년 3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5년 4월 1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7년 4월 2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8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9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0년 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임원 임명동의(안)

1) 사무총장

1. 직책	**국교련 사무총장**	
2. 성명	**전 현 수**	
3. 생년월일	1961. 1. 24	
4. 소속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5. 학력	1983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문학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석사 1998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역사학박사	
6. 경력	1998-200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2001-2003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전임강사 2003-2007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조교수 2007-현재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부교수 2011-현재 통일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2009-2011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위원회 심사위원 2007-20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8 교육인적자원부 인문한국사업 기획전문위원회 기획위원 2007-2009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2005-2007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2005-2005 외교통상부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전담심사반 심사위원 2004-2004 경상북도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실무위원	

2) 고문단

직책	성명	소속대학	상임회장 역임 연도
상임고문	**박 병 덕**	전북대학교 독어교육과	2010년도
고문	**황 한 식**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1999년도
	강 덕 식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00년도
			2001년도
	고 홍 석	전북대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2002년도
	배 한 동	경북대학교 윤리교육과	2003년도
	안 동 환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04년도
	김 송 희	강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005년도
	정 해 룡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06년도
	류 진 춘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007년도
	정 용 하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8년도
	김 광 렬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2009년도

3. 2011년도 사업계획

2011년도 국교련 사업계획

1) 사업 방향

○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연봉제 대응 및 저지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국교련 결집력 극대화

○ 대외 협력·연대·홍보 강화

2)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사업내용
국립대선진화방안 대응 및 저지	(1) 법률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2)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설치
	(3) 고등교육정책포럼 개최
대외협력네트워크 운용	(4) 언론사 및 기자 간담회
조직 역량 강화	(5) 정기 및 임시 총회 개최
	(6) 회장단 회의 개최
	(7) 정책위원회 운영
대외 홍보 강화 및 여론 확산	(8)「정책논평」개설 등 홈페이지 활성화 및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9) 홍보 책자 발간

3) 세부사업내용

(1) 법률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 목적

- 국립대 선진화 방안(법인화, 성과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법률 대응
-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논리 개발

□ 교수단 구성

연번	성 명	소속대학	비고
1	**김 웅 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	**김 창 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간사
3	**김 학 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4	**박 정 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	**송 기 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6	**신 용 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7	**오 정 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8	**정 주 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9	**조 상 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차 법률자문교수단 회의」논의 결과

○ 법률자문교수단이 아래와 같이 자문함.

1.「교육공무원임용령」에 관해

- 개정된「교육공무원임용령」의 학장 지명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송기춘 교수의 책임 아래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2. 성과연봉제에 관해

-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려 시행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성과연봉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모아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3.「고등교육법」에 관해

- 법인화의 문제점과「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를 위해, 박정훈 교수의 책임 아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재정리하기로 함.
- 또한 국교련 차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와 구별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수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변호사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유사한 사안들을 다룬 경험이 많으므로, 방안을 강구할 때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2)「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설치

□ 목적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위한 실행력과 체계성 확보

□ 설치(안)

- 본부 구성 : 거점 국립대 교수회 부회장/의장으로 구성
- 실행위원장 : **김 형 래** (전임 정책위원장, 경북대 교수회 부의장)
- 위치 : 경북대학교

(3) 고등교육정책포럼 개최

□ 목적

- 대안 고등교육정책 개발

□ 추진방법

- 고등교육정책 전문가 초청 세미나
- 고등교육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 추진 일정(안)

회차	일자	장소	초청인사
제1차	5월중	미정	미정
제2차	6월중	미정	미정
제3차	9월중	미정	미정
제4차	10월중	미정	미정
제5차	12월중	미정	미정

(4) 언론사 및 기자 간담회

□ 목적

-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폐단과 고등교육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공정한 보도 요청

□ 추진계획(안)

시기	간담회 대상
4월 중	국회 출입기자단
4월 중	교과부 출입기자단
5월 중	한국기자협회 등
5월 중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 등

(5) 정기 및 임시총회 개최

□ 총회 일정(안)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제1차 임시총회	2011. 04. 08	경북대학교	
제2차 임시총회	**2011. 06. 17**	**경상대학교**	
제3차 임시총회	**2011. 08. 19**	**제주대학교**	하계수련회 연계
제2차 임시총회	**2011. 10. 14**	**부산대학교**	
제5차 임시총회	**2011. 12. 16**	**충남대학교**	
2012년도 정기총회	**2012. 02. 17**	**전남대학교**	

(6) 회장단 회의 개최

□ 회의 일정(안)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제1차 회장단 회의	2011. 03. 11(금)	서울역	
제2차 회장단 회의	**2011. 05. 13(금)**	**서울대학교**	
제3차 회장단 회의	**2011. 07. 15(금)**	미정	
제4차 회장단 회의	**2011. 09. 16(금)**	미정	
제5차 회장단 회의	**2011. 11. 18(금)**	미정	
제6차 회장단 회의	**2012. 01. 13(금)**	미정	

(7) 정책위원회 운영 및 강화

□ 2011년도 정책위원회 구성

직책	성명	소속
정책위원장	**정 병 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책위원	**반 상 진**	전북대 교육학과
	김 영 석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채 형 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책위원회 강화 방안

- 광역별 국립대당 1명의 정책위원 위촉

(8) 「정책논평」 개설 등 홈페이지 활성화 및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 활성화 방안

- 「**정책논평**」 개설
  - 성명서 발표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논평 발표 중심의 의견 제시
  - 투쟁적인 일방적 주장보다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제시
  - 국교련 정책논평을 주요 정책 관계기관, 관계자, 및 언론기관에 배포

-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 발송
  - 주요 동향, 활동 내용을 전체 회원교 및 회원교 교수에게 배포(월 2회)

(9) 홍보 책자 발간

□ 발간 방향

- 국교련의 주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 대화식 문체, Q&A 방식으로 법인화, 성과연봉제 등의 문제점 부각
- 국교련이 지향하는 국립대학의 상 제시
- 선진국의 고등교육정책 소개
- 국교련 산하 대학들의 자기혁신 노력 소개

4. 국립대 선진화 방안 법률대응을 위한 법률자문교수단 활동계획(안)

□ 문제상황

○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1)「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한 총장의 학장 지명권제도의 도입, 2)「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의한 성과연봉제의 도입, 3)「고등교육법」의 개정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법적 현안들에 직면해 있음.

○ 위의 현안들은 '자율적인 국공립대학'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위의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임.

□ 대응의 현황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해서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해서는 국교련 정책연구팀이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 또한 동일한 목적(국공립대학에 대한 통제의 강화)을 위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향후 대응의 방향

○ '자율적인 국공립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보수규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핵심과제의 달성가능성을 높여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명료하게 어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유의미하다고 판단됨.

○ 문제가 정책에 관한 것이라는 점, 따라서 국공립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여론에 대한 어필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기관을 통한 접근보다는 입법기관을 통한 접근이 더욱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법률자문교수단을 중심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동시에, 국회를 통한 문제제기와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판단됨.

5. 정책위원회 활동계획(안)

1. 정책논평

(1) 원칙적 정례화

○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되었듯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서 이외에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평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여론을 조성할 필요 있음.

○ 정책논평은 그 특성상 임기응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물론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한 논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정책논평은 두 달에 한번 총 6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 포럼이 있는 달에는 정책논평 대신 포럼에 집중할 필요 있음.

(2) 주제

1) 국립대 법인화
2) 성과연봉제
3) 고등교육예산
4)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한 교과부 정책(예컨대 대입논술 폐지, 등록금 동결 등) 비판
5) 교과부의 학술진흥 정책
6) 공적·사적 기관의 대학평가 등

2. 정책포럼

(1)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총 2회 정도

(2) 주제

1) 국립대학의 자치와 법인화
   - o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상 요청
   - o 국공립대 법인화를 대체할 만한 대학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안 모색

2) 대학에 대한 기업 내지 자본의 지배와 학문의 자유
   - o 대학의 이념 내지 역할에 대한 방향 설정
   - o 고등교육 예산 확대의 필요성

(3) 기타

o 법률자문교수단 등 내외부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o 교수노조,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네트워크 구축)

o 국회 상임위와도 관계 구축

3. 정책과제

1) 외국 대학의 법인화 사례

o 일본국립대의 법인화 실패 사례, 프랑스와 독일의 국립대 운용 사례 등

o 조직(가버넌스), 예산, 학사, 연구, 정부 혹은 주정부와의 관계 등 세부 사항 검토

2) 성과연봉제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6. 고등교육법개정추진본부 활동계획(안)

1) 개정안 문서의 수정 보완

○ 서울대 박정훈 교수와 협의

○ 국회 전문위원, 또는 대표발의 의원실 전문가와 협의

2) 교수 대상 서명 작업 마감(결과는 별도 자료 참조)

○ 서명 독려 및 결과 취합

○ 서명 원부 복사 제본

3) 실행위원회 재구성

○ 거점국립대학 부회장/부의장 1인 추천 의뢰중

4) 대국회 활동

○ 한나라당 지도부,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상대로 설득 작업

○ 민주당 지도부,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설득 작업

○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도록 최대한 노력 경주

○ 발의 서명 의원 최대한 다수 확보

5) 공청회 또는 토론회

○ 국회의원 주최 : 국회 의원회관 또는 프레스센터, 개정안 발의 이후

○ 국교련 주최 : (효과에 대해 검토 후 추진)

6) 여론 형성 및 확산 활동

○ 언론 매체

○ 교과부

○ 국립대총장협의회

○ 대교협 및 사립대

○ 한국교총

○ 공무원노조 / 대학노조 / 학생회

7) 기타

○ 개정안 홍보 팜플렛 제작

※ 국회 교과위 위원 명단

구분	18대 국회 상반기	**18대 국회 하반기**	비고
상임위원장	이종걸(민)	**변재일(민)**	
한나라당	권영진	**권영진**	
	김선동	**김선동**	
	김세연	**김세연**	
	박보환	**박보환**	
	박영아	**박영아**	
	이군현	**배은희**	신임
	서상기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임해규**	
	정두언	**정두언**	
	조전혁	**조전혁**	
	이철우	**주광덕**	신임
	황우여	**황우여**	
민주당	최재성	**김상희**	신임
	김영진	**김영진**	
	김춘진	**김춘진**	
	안민석	**안민석**	민주당 간사
	김진표	**김유정**	신임
선진당	이상민	**이상민**	
민주노동당	권영길	**권영길**	
무소속	정영희(친박)	**유성엽**	신임

7. ‘국립대공투위’와의 관계설정 건

□ 경과보고

○ 종래 국교련 상임회장이 공투위 상임대표 역임

○ 금년도 공투위 3차회의(2011.03.10)에서 김형기 상임회장이 국교련과 공투위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국교련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발언

○ 지난 제1차 회장단회의(2011.03.11)에서 본 건에 관하여 협의하여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관계설정 방안

○ 회원자격 유지, 회비 납부
○ 상임대표직은 고사, 공동대표직은 유지

III. 참고자료

1. 2011년도 회장단 명단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소속	이동전화	전자우편
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회 / 의장	010-8566-5413	hkim@knu.ac.kr
공동회장	**김세환**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 의장	011-362-0030	phykim@kangwon.ac.kr
	마대영	경상대학교 교수회 / 회장	011-9530-5341	tyma@gnu.ac.kr
	양선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 회장	010-5109-6857	sgyang@dnue.ac.kr
	이병운	부산대학교 교수회 / 회장	011-9500-0877	chairman@pusan.ac.kr
	호문혁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 회장	010-6227-7583	homoon@snu.ac.kr
	박오복	순천대학교 교수회 / 의장	010-5791-3325	ob@sunchon.ac.kr
	김시주	안동대학교 교수평의원회 / 의장	010-3845-3869	sjkim@andong.ac.kr
	문 희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 의장	010-2681-1877	hmoon@jnu.ac.kr
	오원태	충북대학교 교수회 / 회장	010-5492-2245	wntoh@chungbuk.ac.kr
	이종원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 의장	010-9790-6859	jwlee@hanbat.ac.kr
감사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회 / 회장	010-3698-8725	yanggh@jejunu.ac.kr
	김용완	충남대학교 교수회 / 회장	010-3461-5972	prof@cnu.ac.kr

2. 회원교 회(의)장 명단 및 연락처

연번	대학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찬일**	033-760-8723	011-9953-2392	pci@gwnu.ac.kr
2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세환**	033-250-6786	011-362-0030	phykim@kangwon.ac.kr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	**권진택**	055-751-3661	010-3552-3425	kwonjt@jinju.ac.kr
4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형기**	053-950-5413	010-2344-5555	hkim@knu.ac.kr
5	경상대학교 교수회	의장	**마대영**	055-772-7172	011-9530-5341	tyma@gnu.kr
6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신영준**	032-540-1244	010-8711-3308	yjshin@ginue.ac.kr
7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형균**	041-850-1696	011-671-7532	khkgun@gjue.ac.kr
8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복길**	041-521-9152	010-5456-7958	bgchoi@kongju.ac.kr
9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인수**	062-520-4167	010-9554-4877	kis@gnue.ac.kr
10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장	**오길용**	063-469-4364	010-6679-6879	kroh@kunsan.ac.kr
11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낙렬**			nnchoi@kumoh.ac.kr
12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양선규**	053-620-1316	010-5109-6857	sgyang@dnue.ac.kr
13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현상**	061-450-2618	011-9600-0132	buscho@mokpo.ac.kr
14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최주열**	061-240-7206	010-2247-8023	jychoi@mmu.ac.kr
15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연욱**	051-629-6326	019-618-1633	wook@pknu.ac.kr
16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우길주**	051-500-7312	010-9757-7749	kjwoo@bnue.ac.kr
17	부산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병운**	051-510-2603	011-9500-0877	bwnlee@pusan.ac.kr
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	**강계명**	02-970-6629	011-831-5940	littbird@snut.ac.kr
19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회	회장	**변순용**	02-3475-2414	010-5351-7258	bsyethos@snue.ac.kr
20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호문혁**	02-880-7583	010-6227-7583	homoon@snu.ac.kr
21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병호**	02-2210-2635	010-6296-8855	servius@uos.ac.kr
22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오복**	061-750-3325	010-5791-3325	ob@sunchon.ac.kr
23	안동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시주**	054-820-5543	010-3845-3869	sjkim@andong.ac.kr
24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성중**	032-835-8295	010-5322-4451	seongkim@incheon.ac.kr
25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문 희**	062-530-1877	010-2681-1877	hmoon@jnu.ac.kr
26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병덕**	063-270-2726	016-9877-2726	parkbd@jbnu.ac.kr
27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이용주**	063-281-7148	010-9203-7148	yjlee@jnue.kr
28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길현**	064-754-2367	010-3698-8725	yangh@jejunu.ac.kr
29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호범**	055-740-1227	011-559-1058	cheonghb@cue.ac.kr
30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정차근**	055-213-3261	010-3896-8347	jungchgo@changwon.ac.kr
3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양창모**	043-299-0851	010-3429-4206	cmyang@cje.ac.kr
32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이도영**	033-260-6417	017-278-8184	dylee@cnue.ac.kr
33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용완**	042-821-5392	010-3461-5972	ywkim@cnu.ac.kr
34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원태**	043-261-2245	010-5492-2245	wntoh@cbnu.ac.kr
35	충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권 일**	043-841-5413	010-8953-5413	ikwon@cjnu.ac.kr
36	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태범석**	031-670-5203	011-343-8901	gaia@hknu.ac.kr
37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이민부**		010-3413-3242	minblee@knue.ac.kr
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복연**	02-3668-4684	010-6366-4684	byhan@knou.ac.kr
39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동혁**	051-410-4294	011-451-4294	donghkim@hhu.ac.kr
40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종원**	042-821-1252	010-9790-6859	jwlee@hanbat.ac.kr

3. 회원교 임원 명단 및 연락처

소속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찬일	033-760-8723	011-9953-2392	pci@gwnu.ac.kr
	수석부회장	구자혁	033-640-2118	010-9068-3417	jhkoo@gwnu.ac.kr
	부회장	김백기	033-760-8802	010-9424-6353	bkkim@gwnu.ac.kr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세환	033-250-6786	011-362-0030	phykim@kangwon.ac.kr
	부의장	임학태	033-250-6474	010-5367-5423	limhakta@kangwon.ac.kr
	부의장	남시병	033-570-6535	010-9722-3214	sbnam@kangwon.ac.kr
	사무처장	박인철	033-250-8675	010-3539-5137	icpark@kangwon.ac.kr
	사무처장	신기동	033-570-6872	010-8131-7802	shinkee@kangwon.ac.kr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	권진택	055-751-3661	010-3552-3425	kwonjt@gntech.ac.kr
	부의장	주욱수	055-751-3273	010-4589-7167	osjoo@gntech.ac.kr
	사무국장	이석배	055-751-3298	010-4232-6364	sblee@gntech.ac.kr
	간사	김병철	055-751-3336	010-4906-3336	bckim@gntech.ac.kr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형기	053-950-5413	010-2344-5555	hkim@knu.ac.kr
	부의장	김형래	053-950-5845	010-8779-3907	kimhr@knu.ac.kr
	부의장	이광호	053-530-1404	016-9543-5404	khl@knu.ac.kr
	사무처장	전현수	053-950-5137	010-3539-5137	jeonhs@knu.ac.kr
	사무부처장	이원하	053-950-5388	010-4530-7914	whl@knu.ac.kr
	사무부처장	정하명	053-950-7250	010-2785-1497	hmjeong@knu.ac.kr
	사무부처장	천선영	053-950-5222	010-9901-0611	chunsy@knu.ac.kr
경상대학교 교수회	의장	마대영	055-772-7172	011-9530-5341	tyma@gnu.kr
	부의장	차영길	055-772-2174	010-7597-6911	istori@gnu.kr
	부의장	김연웅	055-772-8052	010-2508-7568	ywkim@gnu.kr
	부의장	김정균	055-772-9141	011-9058-4112	kimjg@gaechuk.gnu.kr
	정책국장	최근배	055-772-1544	010-8810-7581	kbchoi@gnu.kr
	사무국장	차춘남	055-772-1701	010-9800-5341	cncha@gnu.kr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신영준	032-540-1244	010-8711-3308	yjshin@ginue.ac.kr
	부회장	김용희	031-470-6312	010-2740-3443	musica@ginue.ac.kr
	부회장	한선관	032-540-1299	010-5171-1299	han@ginue.ac.kr
	총무(인천)	김해경	032-540-1276	010-3665-2592	kimhk@ginue.ac.kr
	총무(경기)	김 호	031-470-6322	010-5775-3279	hoho@ginue.ac.kr
	정책팀장	이동원	032-540-1227	010-2613-2980	youngdw@ginue.ac.kr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형균	041-850-1696	011-671-7532	khkgun@gjue.ac.kr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복길	041-521-9152	010-5456-7958	bgchoi@kongju.ac.kr
	부회장	이주경	041-850-8319	010-5439-8319	jklee@kongju.ac.kr
	부회장	박 호	041-521-9285	010-8610-0373	tigerpark@kongju.ac.kr
	부회장	김병수	041-330-1523	0103678-9256	bskim@kongju.ac.kr
	감사	이병기	041-850-8252	010-9984-1378	lisdoc@kongju.ac.kr
	감사	이효구	041-330-1482	018-219-4198	hhklee@kongju.ac.kr
	사무국장	김영길	041-850-8309	010-6474-3982	ygkim@kongju.ac.kr
	기획행정간사	김건수	041-850-0362	010-6212-5297	kimgs@kongju.ac.kr
	교육재정간사	홍성애	041-850-0326	010-4422-0777	hsa6362@kongju.ac.kr

소속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인수	062-520-4167	010-9554-4877	kis@gnue.ac.kr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장	오길용	063-469-4364	010-6679-6879	kroh@kunsan.ac.kr
	부회장				
	부회장				
	총무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 장	최낙렬			nnchoi@kumoh.ac.kr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판우**		**010-9956-1432**	**pwpark@dnue.ac.kr**
	부회장	**고선미**			
	부회장	**박세원**			
	총무간사	**주현준**		**011-9407-7169**	**joohyunj@dune.ac.kr**
	회계및편집간사	**김황기**			
	감사	**이종목**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현상**	**061-450-2618**	**011-9600-0132**	**buscho@mokpo.ac.kr**
	부의장	**전철균**	**061-450-2413**	**010-4755-2413**	**ckchun@mokpo.ac.kr**
	사무국장	**김병록**	**061-450-2246**	**010-8833-6689**	**brkim@mokpo.ac.kr**
	편집위원장	**이경엽**	**061-450-2107**	**010-9558-6559**	**lky3528@hanmail.net**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최주열	061-240-7206	010-2247-8023	jychoi@mmu.ac.kr
	부의장	최조천			
	총무간사	김준효			
	감사				
	감사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연욱**	**051-629-6326**	**019-618-1633**	**wook@pknu.ac.kr**
	부회장	**김영일**	**051-629-5588**	**010-2580-6376**	**ykim@pknu.ac.kr**
	부회장	**박종운**	**051-629-5971**	**010-5207-0854**	**pjun9017@pknu.ac.kr**
	총무이사	**최순권**	**051-629-5761**	**010-7287-5761**	**sgchoi@pknu.ac.kr**
	기획이사	**김창수**	**051-629-5457**	**010-2724-3659**	**csookim@pknu.ac.kr**
	복지이사	**조윤경**	**051-629-5384**	**010-3214-6564**	**ykcho@pknu.ac.kr**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우길주**	**051-500-7312**	**010-9757-7749**	**kjwoo@bnue.ac.kr**
	부회장	**정지윤**	**051-500-7286**	**010-2817-0100**	**jyjung@bnue.ac.kr**
	총무	**홍갑주**	**051-500-7238**	**010-8940-0159**	**gapdol@bnue.ac.kr**
부산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병운**	**051-510-2603**	**011-9500-0877**	**bwnlee@pusan.ac.kr**
	부의장	**김종구**	**051-510-3520**	**010-3553-1088**	**jkkim45@pusan.ac.kr**
	부의장	**박재홍**	**055-360-3153**	**010-9319-7293**	**jhongpark@pusan.ac.kr**
	부의장	**한지숙**	**051-510-2836**	**010-3839-3616**	**hanjs@pusan.ac.kr**
	총무기획간사	**김정구**	**051-510-3733**	**010-5093-3733**	**kimjg@pusan.ac.kr**
	학술연구간사	**문용환**	**051-510-2592**	**010-6423-2578**	**moonyh@pusan.ac.kr**
	재무복지간사	**김무성**	**051-510-2571**	**010-3867-2571**	**kmoosung@pusan.ac.kr**
	문화홍보간사	**윤석찬**	**051-510-2520**	**010-9399-6799**	**scyoon@pusan.ac.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회장	강계명	02-970-6629	011-831-5940	littbird@snut.ac.kr
	부회장	이동훈	02-970-6331	010-6733-6331	ldh@snut.ac.kr
	부회장	김선민	02-970-6497	010-2735-6497	skim@snut.ac.kr
	부회장	오영재	02-970-6553	010-2224-7081	ohyj@snut.ac.kr
	부회장	오상근	02-970-6559	010-5238-2955	ohsang@snut.ac.kr
	총무이사	이수룡	02-970-6346	011-9017-6705	srlee@snut.ac.kr
	총무이사	류민영	02-970-6391	011-9750-4019	mylyu@snut.ac.kr
	재무이사	노인섭	02-970-6603	019-284-8739	insup@snut.ac.kr
	감사	최창규	02-970-6410	011-797-6410	choick@snut.ac.kr
	감사	손기상	02-970-6388	016-9877-2433	ksson@snut.ac.kr

소속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회	회장	변순용	02-3475-2484	010-5351-7258	bsyethos@snue.ac.kr
	부회장	류재만	02-3475-2492	018-277-6758	jm320@snue.ac.kr
	부회장	장용규	02-3475-2472	011-9703-2564	ykchang@snue.ac.kr
	총무	홍영식	02-3475-2466	016-372-1951	njyshong@snue.ac.kr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호문혁	02-880-7583	010-6227-7583	homoon@snu.ac.kr
	부회장	윤원철	02-880-6238	011-9192-7069	yunwc@snu.ac.kr
	부회장	홍두승	02-880-6414	010-3265-6414	dshong@snu.ac.kr
	부회장	김도한	02-880-6548	010-7131-8995	dhkim@snu.ac.kr
	부회장	옥선화	02-880-6823	011-305-7881	swok5481@snu.ac.kr
	부회장	고상근	02-880-7115	010-9784-7115	kauh@snu.ac.kr
	부회장	현정오	02-880-4753	018-381-2248	junghyun@sun.ac.kr
	부회장	양현권	02-880-7680	010-4722-6295	yhkeun@snu.ac.kr
	부회장	이성철	02-2072-3636	010-7190-0697	leesc@plaza.sun.ac.kr
	부회장	김병섭	02-880-8533	016-276-4669	bskimn@snu.ac.kr
	감사	최갑수	02-880-6206	011-9713-3684	kchoi7@snu.ac.kr
	감사	최순철	02-2072-2622	016-393-3498	raychoi@snu.ac.kr
	총무이사	황인규	02-880-4676	010-5214-6507	ingyu@sun.ac.kr
	기획이사	이철수	02-880-7552	010-7755-3463	charles2@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병호	02-2210-2635	010-6296-8855	servius@uos.ac.kr
	부회장	동종인	02-2210-2532	010-5418-4935	jidong@uos.ac.kr
	부회장	정혜숙	02-2210-5694	010-2528-3144	hschong@uos.ac.kr
	총무	홍기원	02-2210-5129	010-5012-5665	legalhistory@uos.ac.kr
	감사	김경태	02-2210-5723	010-2419-3909	ktkim@uos.ac.kr
	감사	이선영	02-2210-2633		syrieh@uos.ac.kr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오복**	**061-750-3325**	**010-5791-3325**	**ob@sunchon.ac.kr**
	부의장	**박병희**	**061-750-3464**	**010-4750-3464**	**parkbh@sunchon.ac.kr**
	사무처장	**최용석**	**061-750-5115**	**010-2636-8763**	**drasto@sunchon.ac.kr**
안동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시주	054-820-5543	010-3845-3869	sjkim@andong.ac.kr
	부의장	노석호	054-820-5569	010-3055-5569	shnoh@andong.ac.kr
	부의장	이화진	054-820-5356	010-9167-8645	ihwajin@andong.ac.kr
	사무국장	윤재형	054-820-5415	016-313-6776	jhy@andong.ac.kr
	정책국장	김석규	054-820-5163	011-430-0277	sgkion@andong.ac.kr
	감사	전영록	054-820-5741	010-6555-5741	jeon@andong.ac.kr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성중	032-835-8295	010-5322-4451	seongkim@incheon.ac.kr
	부회장	박창화	032-835-8774	010-4356-9888	pcwgreen@incheon.ac.kr
	총무	홍진배	032-835-8583	010-6742-9778	jhong@incheon.ac.kr
	총무	이은주	032-835-8621	010-6306-7100	eunj55@incheon.ac.kr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문 희**	**062-530-1877**	**010-2681-1877**	**hmoon@jnu.ac.kr**
	부의장	**전덕영**	**062-530-1335**	**010-3130-4953**	**dyjhon@jnu.ac.kr**
	부회장	**오상은**	**062-220-4354**	**010-3954-5408**	**seoh@jnu.ac.kr**
	기획간사	**최영수**	**062-530-2157**	**010-3622-2157**	**y-choi@jnu.ac.kr**
	서기간사	**양형식**	**062-530-1724**	**011-623-6375**	**hsyang@jnu.ac.kr**
	총무간사	**양채열**	**062-530-1443**	**010-7221-1443**	**cyyang@jnu.ac.kr**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병덕**	**063-270-2726**	**016-9877-2726**	**parkbd@jbnu.ac.kr**
	부회장	**최백렬**	**063-270-3014**	**010-3579-3014**	**brchoi@jbnu.ac.kr**
	부회장	**박주미**	**063-270-2030**	**010-3683-7202**	**jmpark@jbnu.ac.kr**
	감사	**이장춘**	**063-270-4786**	**010-6618-6654**	**ljc@jbnu.ac.kr**
	감사	**김성주**	**063-270-3093**	**010-5602-6532**	**szkim@jbnu.ac.kr**
	사무처장	**정동섭**	**063-270-3281**	**010-2630-3281**	**dsjung@jbnu.ac.kr**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이용주**	**063-281-7148**	**010-9203-7148**	**yjlee@jnue.kr**
	부회장	**권순희**	**063-281-7132**	**011-9798-2163**	**shkwon@jnue.kr**
	총무	**박상준**	**063-281-7138**	**011-9034-1968**	**psj68@jnue.kr**

소속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길현	064-754-3267	010-3698-8725	yangh@jejunu.ac.kr
	수석부회장	송성회	064-75402743	010-6607-6038	hoe2743@cheju.ac.kr
	부회장	곽영숙	064-717-1525	010-3731-9406	yskcpy@jejunu.ac.kr
	총무	고대만	064-754-4802	010-7660-5964	kodm@jejunu.ac.kr
	총무	김한일	064-754-3291	010-8280-3291	hikim@cheju.ac.kr
	감사	윤용택	064-754-2753	010-9977-2178	sumsaram@cheju.ac.kr
	감사	홍경선	064-754-4903	010-2651-6777	hongks@jejunu.ac.kr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호범	055-740-1227	011-559-1058	cheonghb@cue.ac.kr
	부회장	박기용	055-740-1213	010-8507-2918	nare@cue.ac.kr
	총무위원	정연옥	055-740-1281	016-585-6263	chongyo@cue.ac.kr
	연구위원	박용조	055-740-1223	016-242-4755	pyjyhs@cue.ac.kr
	홍보위원	김도헌	055-740-1301	010-2880-8690	dhkim@cue.ac.kr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정차근	055-213-3261	010-3896-8347	jungchgo@changwon.ac.kr
	부의장	김창순	055-213-3512	010-3535-8409	cskim@changwon.ac.kr
	부의장	이수현	055-213-3816	010-9025-3856	suhyun@changwon.ac.kr
	사무국장	안철진	055-213-3438		cjahn@changwon.ac.kr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양창모	043-299-0851	010-3429-4206	cmyang@cje.ac.kr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이도영	033-260-6417	017-278-8184	dylee@cnue.ac.kr
	부회장	박성선	033-260-6455	010-4116-1975	starsun@cnue.ac.kr
	총무	윤혜경	033-260-6468	010-2379-3216	yoonhk@cnue.ac.kr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용완	042-821-5392	010-3461-5972	ywkim@cnu.ac.kr
	부회장	허성호	042-821-5488	010-8026-5488	sungho@cnu.ac.kr
	부회장	김미연	042-821-5355	010-4437-6736	kimmy@cnu.ac.kr
	총괄운영위원	이종신	042-821-5757	011-9819-6709	lee_js@cnu.ac.kr
	상임운영위원	양준영	042-280-7351	010-6421-3802	jyyang@cnu.ac.kr
	상임운영위원	윤희천	042-821-6583	011-208-3747	hcyoon@cnu.ac.kr
	정책위원	오길영	042-821-6515	011-743-7961	ogy@cnu.ac.kr
	정책위원	박종성	042-821-5334	010-6751-5334	jspark61@cnu.ac.kr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원태	043-261-2245	010-5492-2245	wntoh@cbnu.ac.kr
	부회장	서관모	043-261-2184	010-8800-6736	soguan@cbnu.ac.kr
	부회장	윤혜미	043-261-2794	011-9639-2794	hmyoon@cbnu.ac.kr
	기획이사	모인필	043-261-1693	010-9330-5602	moip@cbnu.ac.kr
	총무이사	김남준	043-261-2281	010-9423-2281	namjkim@cbnu.ac.kr
충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권 일	043-841-5413	010-8953-5413	ikwon@cjnu.ac.kr
	수석부회장	이병찬	043-841-5358	019-315-4571	bclee@cjnu.ac.kr
	부회장	조운주	043-820-5274	010-6413-4165	wjcho@cjnu.ac.kr
	사무처장	박상근	043-841-5122	011-223-3448	skpark@cjnu.ac.kr
	상임위원장	신태명	043-841-5377	010-4814-5370	tmshin@cjnu.ac.kr
	상임위원장	정순석	043-841-5496	018-406-0607	sschung@cjnu.ac.kr
	상임위원장	김태진	043-841-5408	019-329-5098	tjkim@cjnu.ac.kr
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태범석	031-670-5203	011-343-8901	gaia@hknu.ac.kr
	수석부회장	김한정	031-670-5291	010-9416-5290	hjkim@hknu.ac.kr
	부회장	김경애	031-670-5311	010-9035-7334	kakim@hknu.ac.kr
	부회장	남기택	031-670-5125	010-3733-5127	ktnam@hknu.ac.kr
	총무이사	이득환	031-670-5091	010-9320-5091	dhlee@hknu.ac.kr

소속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이민부	043-230-3630	010-3413-3242	minblee@knue.ac.kr
	부의장	조민식	043-230-3756	010-8776-3756	mscho@knue.ac.kr
	사무총장	김종우	043-230-3647	010-5663-8581	hermesos@knue.ac.kr
	대의원	장수명	043-230-3446	010-4936-4549	smjang@knue.ac.kr
	대의원	김도기	043-230-3413	010-4708-0174	kogoldax@knue.ac.kr
	대의원	최지연	043-230-3439	011-303-1955	jychoi@knue.ac.kr
	대의원	김왕규	043-230-3546	011-269-4265	wind63@knue.ac.kr
	대의원	박병기	043-230-3642	011-296-7124	bkpak15@knue.ac.kr
	대의원	문윤섭	043-230-3769	010-9323-4117	ysmoon@knue.ac.kr
	대의원	김현주	043-230-3766	010-9320-8950	hjkim21@knue.ac.kr
	대의원	고영신	043-230-3473	010-9334-6271	ysgo820@knue.ac.kr
	대의원	박종률	043-230-3486	011-459-5265	pjl0703@knue.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복연	02-3668-4684	010-6366-4684	byhan@knou.ac.kr
	부회장	이용철	02-3668-4585	010-7350-8803	yongchul@knou.ac.kr
	부회장	노형규	02-3668-4617	010-7510-4105	nohg704@knou.ac.kr
	부회장	이기재	02-3668-4694	011-9650-9470	kjlee@knou.ac.kr
	부회장	이해주	02-3668-4667	010-6213-9568	haejoole@knou.ac.kr
	감사	안병국	02-3668-4575	010-3344-7159	bkahn@knou.ac.kr
	감사	김희태	02-3668-4673	010-2717-1794	kht@knou.ac.kr
	예결심의위원장	전용오	02-3668-4665	010-6249-5291	yojun@knou.ac.kr
	정책위원장	권수열	02-3668-4705	010-7132-4899	sykwon@knou.ac.kr
	권익위원장	이영음	02-3668-4713	010-9895-5499	yesunny@knou.ac.kr
	총무	김종오	02-3668-4624	010-6233-4333	jokim@knou.ac.kr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동혁	051-410-4294	011-451-4294	donghkim@hhu.ac.kr
	부회장	송재욱	051-410-4272	010-6556-9199	songcu@hhu.ac.kr
	총무분과간사	오용식	051-410-4401	010-9815-0305	ysoh@hhu.ac.kr
	기획/재정분과간사	김유택	051-410-4258	010-8334-4258	kimyt@hhu.ac.kr
	복지분과간사	박영수	051-410-5085	010-9439-1778	youngsoo@hhu.ac.kr
	홍보분과간사	홍옥숙	051-410-4594	010-7573-2335	hongoksook@hhu.ac.kr
	대외협력위원장	이재형	051-410-4793	010-5057-4793	jhlee3416@hhu.ac.kr
	교권증진위원장	신창훈	051-410-4333	010-2705-4281	chshin@hhu.ac.kr
	행정혁신위원장	박찬근	051-410-4372	010-9598-0680	chapark@hhu.ac.kr
	법률고문	이용희	051-410-4395	010-9185-6501	yhlee@hhu.ac.kr
	감사	정홍열	051-410-4407	010-2779-2077	jhy@hhu.ac.kr
	감	박권하	051-410-4367	010-9455-5413	khpark@hhu.ac.kr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종원	042-821-1252	010-9790-6859	jwlee@hanbat.ac.kr
	부의장	진영택	042-821-1210	010-3469-3797	ytjin@hanbat.ac.kr
	부의장	박덕용	042-821-1278	011-250-3554	dypark@hanbat.ac.kr
	사무처장	우승한	042-821-1537	010-5577-5597	shwoo@hanbat.ac.kr

4. 정책위원 명단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소속	이동전화	전자우편
정책위원장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10-6296-8855	servius@uos.ac.kr
정책위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010-5128-2889	sjban@jbnu.ac.kr
	김영석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010-9433-0751	yskim@gnu.ac.kr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11-817-7609	europia@knu.ac.kr

5. 법률자문교수단 명단 및 연락처

연번	성명	소속대학	이동전화	전자우편
1	**김웅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10-7130-5110	kwkyu9@hanmail.net
2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10-9480-6936	chrkim@knu.ac.kr
3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10-3857-6511	gimhs@kangwon.ac.kr
4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010-4787-7556	altphil@hanmail.net
5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16-9881-5466	kcsong@jbnu.ac.kr
6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16-433-7419	yongin30@jejunu.ac.kr
7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019-9162-1237	jungjin@pusan.ac.kr
8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42-821-8509	jeongjb@cnu.ac.kr
9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10-9449-0249	skcho@jnu.ac.kr

6. 사무처 명단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전송	전자우편
사무총장	**전현수**	053-957-2011	010-3539-5137	053-959-5266	jeonhs@knu.ac.kr
전문위원	**황종인**	053-957-2011	010-6368-6408	053-959-5266	mal-zzang@knu.ac.kr

7. 보도기사

[한겨레 11.02.17]

“고등교육법 개정해 ‘대학 기업화’ 저지할 것”
‘국교련’ 새 회장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

“정부는 국·공립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법인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돈벌이를 부추기고 1980년대 이후 어렵게 이뤄낸 학내 민주화만 훼손될 게 뻔합니다.”
지난 17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 총회에서 신임 상임회장으로 선출된 김형기(사진·경북대 교수회장·경제통상학부)교수는 국·공립대학의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며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말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를 시작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 사회의 과도한 정치화를 빌미로 학장 직선제를 폐지했지만,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면 밀실 정치 부작용이 더 큽니다. 줄서기와 연공서열이 강화되니까요.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을 협력 대신 경쟁하도록 만들고, 순수 학문 생산을 저해하며, 법인화된 국립대학은 급속히 기업화할 것입니다.”

국교련이 ‘저항’의 방편으로 삼은 것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률 개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을 지도·감독하게 돼있는 고등교육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지도권을 빼야 한다”며 “그 대신 감독·감사권을 강화하면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확보되면서도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국교련은 앞으로 40개 회원대학 소속 교수들의 서명작업과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교과부의 국립대 정책에 대한 헌법 소원과 고등교육법 위헌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자치기구를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켜 대학 운영의 전권을 가진 총장과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대학이 합리적인 구조로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국공립대의 공교육화가 바른 방향을 찾게 될 겁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매일신문, 11.02.19]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교육 황폐화 초래…정책 철회 서둘러야”
국공립대교수연합회 상임회장 김형기 교수

김형기(58)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 신임 상임회장에 선임됐다.
국교련은 17일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운동의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응으로 ‘자율형 국립대학’을 주장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사회연구소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대학 법인화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법인화, 성과연봉제, 학장직선제 폐지)이 전방위로 강행되고 있는 현 정세 속에 국립대학의 정체성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학의 관치 공기업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대학공동체의 붕괴, 학장 직선제 폐지에 따른 대학민주화의 후퇴 등 ‘3중의 재난’이 국립대학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과 학장직선제 폐지에 따른 법적 대응, 법인화에 대응한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 무효화 투쟁 지원 등이 올해 국교련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립대학의 자율성 완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실로 국립대학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황폐화시킬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서울신문, 2011. 02. 21]

[열린세상] 국립대학을 제대로 키우려면/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대학들이 급격한 체제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대는 2012년에 정부조직으로서의 존재를 마감하고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법인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로 법인화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법인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는데,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반 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총장 선출 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계속되지만, 대학은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화가 정부 간섭을 줄이고 대학 자율을 확대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화로 서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역 국립대학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법인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법인화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인화의 수혜 대상인 국립대 구성원들은 정부의 법인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두달 가까이 교수들이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법안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립대학총학생회연합회, 공무원 노조 등도 법인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립대학의 구성원들은 법인화로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정적 자립도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와 재정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교과부 파견 감사가 상근하는 이사회 체제에서는 교수의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는 고등교육법을 통한 지도감독체제 하에서 정부 중심의 지배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학 법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보장된 반면, 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줄이고 재정 지원은 축소하려는 것이 법인화의 진정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가혹한 자기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적 관리로부터 탈피하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획기적인 재정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화가 국립대학의 유일한 발전 방안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법인화 6년 후 일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은 악화되었다. 국고지원금이 6년 사이 6% 삭감되고, 교직원의 수와 보수도 줄어들었다. 실질 연구비가 줄고 학술논문의 수도 크게 감소했다. 일본 주요 대학들의 세계랭킹도 하락했다.

법인화가 아니더라도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국립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학사, 인사, 조직,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립대학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대신 공익성과 효율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국립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법인화를 넘어 국립대학을 살리고 우리사회의 미래도 밝히는 길이 될 것이다.

[교수신문, 2011.02.21]

국교련, ‘자율형 국립대’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장, 국교련 신임 회장 선출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장(58세, 경제통상학부·사진)이 지난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상임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의 대안으로 ‘자율형 국립대’를 실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제대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교수사회 내의 자생적인 자기혁신의 모습도 지켜봐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교련이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정부는 법인화 추진의 명분으로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법인화를 하지 않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립대 법률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율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교련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조항 중 ‘지도’가 독소조항이라고 본다.

정부는 대학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법률 위반이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 등 사후 철저한 감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이 오히려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자치기구에 대한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해 대학 총장과 대학 자치기구가 공동 통치 형태의 지배구조를 제안한다. 또, 국립대의 재정 주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국립대가 하고 있는 소규모 수익사업의 수익금도 정부로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해당 대학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규정하자는 안이다.

국교련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비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국회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교련은 이외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리고 법률적인 대응도 할 방침이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교수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문화일보, 2011.03.04]

“국립대 법인화 반대” 64%
구성원 3721명 설문… ‘정부 재정지원 축소’ 걱정

국립대 구성원 5명 중 3명은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거점 국립대들의 단계적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인화에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이필남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이 법인화가 결정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국립대 구성원 중 15%(3721명)를 설문조사해 내놓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연구’에 따르면 법인화 반대 비율이 64.3%에 달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이 21.5%, 법인화 자체는 반대하지만 현재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조건부 반대’가 42.8%였다.

법인화에 ‘적극 찬성’(2.5%)하거나, 선결조건이 해결된다면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29.4%) 등 법인화 찬성 입장은 31.9%로 나타났다. 법인화 반대 비율은 일반직 공무원(50.1%)이나 기성회 직원(59.4%)보다 교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국립대 교수의 75.1%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법인화 이후 ‘정부 재정지원 축소’(4.38점)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고, ‘대학 내 구성원 의사 반영 약화’(3.71점), ‘정부 간섭과 통제 강화’(3.46점)에 대한 우려도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평화뉴스, 2011. 03. 20]

민주 절차는 MB 인사의 적?
[김윤상 칼럼] 학장 임용, 추천도 선출도 못하게 하다니.....

이명박 정부가 '빼앗긴 10년'을 되찾는다면서 무리한 인사를 많이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PD수첩>이 얼마 전 보도한 낙하산 인사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185명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3년간 306명에 달한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자기 사람 심으려고 전임자를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처럼) 부당하게 쫓아낸 사례도 적지 않다. 지금 진행 중인 대구대 사태처럼 사립대를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이상한 인사 방침을 고집하기도 한다.

오늘은 새로 바뀐 국립대 단과대학장 임명 제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평화뉴스> 독자 중에는 대학 인사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을 잘 드러내는 추가 사례의 하나로 감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다.

학장 임용에 평교수 의견 차단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단과대학장 임용을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총장이 학장을 임명할 때는 평교수의 의견 반영 기회를 철저히 차단하고 총장이 전횡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80년 후반 민주화 이전에 총장이 되려는 교수는 청와대 등 정치권과 (당시) 문교부에 잘 보여야 했고 APC로 약칭되는 중정, 경찰 및 군 정부 계통에서 좋은 보고가 올라가도록 애를 썼다. 또 단과대학 학장이 되려는 교수는 그런 총장에게 잘 보여야 했다. 그러니 총장이든 학장이든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들의 제1의 관심사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비판적 교수를 잠재우고 학생 데모를 막는 데 있었다.

학장 선거가 최선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교수들은, 총장과 학장의 임용에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쟁취하였다. 총장 선거제는 법령에 의해 공식화되었고, 학장의 경우는 단과대학 교수들이 선거를 해서 2배수 정도 추천을 하면 총장은 못이기는 척 1위 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때로는 추천된 후보가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예외적인 일이었다.

이런 학장 임용 방식을 학내외에서는 '학장 선거'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학장 후보 추천일 뿐이다. 총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을 해야 학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선거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일반 선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총장 직선제가 공식화 되고 학장 후보 추천이 관행이 된 지금은 학장 하려고 정치권을 기웃거리거나 총장에 아부하는 교수는 사라졌다. (그 후 상당수 사립대에서는 총학장 임용이 종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고 '학장 선거'에도 물론 부작용이 있다. 필자는 아직은 '학장 선거'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총장 직선제와 학내 민주화가 정착된 경우라면 '학장 선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학장을 선거나 추천 없이 총장이 임명하더라도 대학의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가 아닌지 검증하는 절차를 두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학에 맡기면 된다.

민주 질식, 유신시대의 끔직한 기억이

그런데도, "총장이 학장 후보의 추천을 받아서도 안 되고 평교수가 후보를 선출해서도 안 된다"고 법령에 명시하다니. 너무나 황당하다. 간부를 선거로 뽑던 학생회를 없애고 학도호국단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유신시대의 끔직한 기억이 떠오른다. 초등학생도 반장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데 대학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정권의 거듭되는 비행을 접하면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양식 있는 보수를 동정하게 된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파를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했더니 그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민주, 인권, 자유 등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보수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대표선수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번 선수는 진짜입니다" 할 것인가? 궁색하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권을 감싸기보다는 뼈저린 비판과 함께 내부의 압력을 높여 가시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주면 좋겠다. 필자처럼 반대파라고 찍힌 사람은 백날 충고해봤자 아예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부탁하는 말이다.

[김윤상 칼럼 37]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yskim@knu.ac.kr

[경향신문, 2011.04.01]

서울대 법인화 진통 '논의 없는 속도전' 탓

· 총장실 복도 점거 등 학내 갈등 왜 일어났나

서울대 법인화 작업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화 준비 과정에서 배제된 서울대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는 등 학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날치기 통과된 데 따른 후유증이다.

서울대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학생 등 300여명은 대학본부 측이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지난달 31일 총장실 앞 복도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데 이어 1일 오전에는 "일방적 법인화 강행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점거농성으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1일 새벽 4시에 퇴근할 수 있었고 이후 외부일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 "총장이 대화 의지를 보이는 만큼 믿고 기다리겠다. 앞으로 점거나 출근 저지 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은 일단락됐다.

이들의 농성은 법인 설립준비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정용철 서울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일 "설립준비위 구성을 놓고 지난 1월부터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법인화로 인해 신분이 바뀌게 될 직원 1030명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를 준비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쟁점별 입장

반대 측 입장	쟁점	대학본부 입장
대학·학문 간 균형발전 저해 시장논리의 대학 지배	법인화 필요성	자율성 확보 교육 · 연구역량 강화 세계 일류대학 성장
학내·외 비판기능 상실 정부·기업 직접 간섭 심화	총장·이사회 중심 지배구조	강력한 리더십으로 책임 운영 학교 운영 유연화
정부 지원 축소로 학생 부담 증가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까지 영향	등록금 급등 우려	발전기금 모금 자율화로 인상 요인 해소 장학금 지원 확대
시장논리 지배로 결국 고사	기초학문 고사 우려	기초학문진흥위 설치로 세부 보호규정 마련

표면적으로는 법인화를 강행하는 서울대 본부 측과 이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된

후폭풍이 학내에 불어닥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 법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속도전'을 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인'이 된다. 정부와 서울대 본부 등에서는 법인화의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자율성 제고'를 꼽고 있다.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 모금 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뤄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법인 서울대'가 지향하는 목표다.

하지만 '법인화법'의 내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정부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하는 조항(9조)과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상근 감사를 둔다는 조항(5조)이 대표적이다. 이는 2009년 서울대가 교과부에 제출한 법인화 안에는 들어 있지 않던 것으로 교과부가 임의로 넣은 조항이다.

법인화 이후에도 국고 지원이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대로서는 정부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인 학문의 자유와 사회비판적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원 확대의 손쉬운 방책으로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자율을 보장한 만큼 그동안 받아온 국고 지원액 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학생들의 부담만 늘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대 본부 측은 "재정 문제를 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장학금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풀린 만큼 발전기금 모금과 수익사업 확대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캠퍼스 상업화 논란과 수익사업 실패 시 부담 우려가 남는다.

이 과정에서 '돈이 되는 학문'에만 집중 투자가 이뤄져 여러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당수 기초학문 분야 교수들은 "경쟁력과 성과 위주의 시장논리가 대학운영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상 기초학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환보·목정민 기자 botox@kyunghyang.com

Ⅳ. 안내사항

□ 만찬

- 만찬장 : 대구 수성구 '안압정' 한정식 : 053-742-3369
- 만찬장 이동
  - 단체버스 : 경북대 우체국 앞(복지관 동편 1층), 18:00 출발
  - 개별차량 : 아래 약도 참조

□ 답례품

- 품목 :「자소 흑마늘」엑기스, 경상북도 칠곡군
- 제공 :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강미영 교수